

국내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확대

전년 보다 66.2% 늘려 5874만9261MWh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국내 24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RPS)을 지난해 대비 66.2% 늘어난 5874만9261메가와트시(MWh)로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환산하면 782만410REC로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6개 발전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16개 민간발전사를 포함해 24개사다.

의무공급비율이 9%에서 12.5%로 확대되며 발전사들의 의무공급 REC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954만7185MWh으로 가장 많고 남부발전(769만2343MWh), 중부발전(742만89MWh), 서부발전(688만2132MWh), 동서발전(663만739MWh), 남동발전(660만9089MWh) 순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9만1601MWh로 가장 적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남부발전으로 315만6467MWh이며 한수원(288만594MWh), 서부발전(281만4831MWh), 중부발전(226만641MWh), 동서발전(183만2631MWh), 남동발전(121만3701MWh) 순이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를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거나,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무 공급량을 채운다.

발전사들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구매해 RPS기준을 맞추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MWh를 생산하면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민간 발전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REC를 발전사업자에 판매할 수 있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감리로 증설 가능

앞으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외부 감리 없이 자체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를 통해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제8차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자체 감리를 허용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부품의 신속한 교체가

가능해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내 25킬로와트(kW) 인버터 교체 시 제품 가격과 공사비용은 각각 350만원, 100만원인 반면 외부 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소요돼 부품 교체 등이 지연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시간·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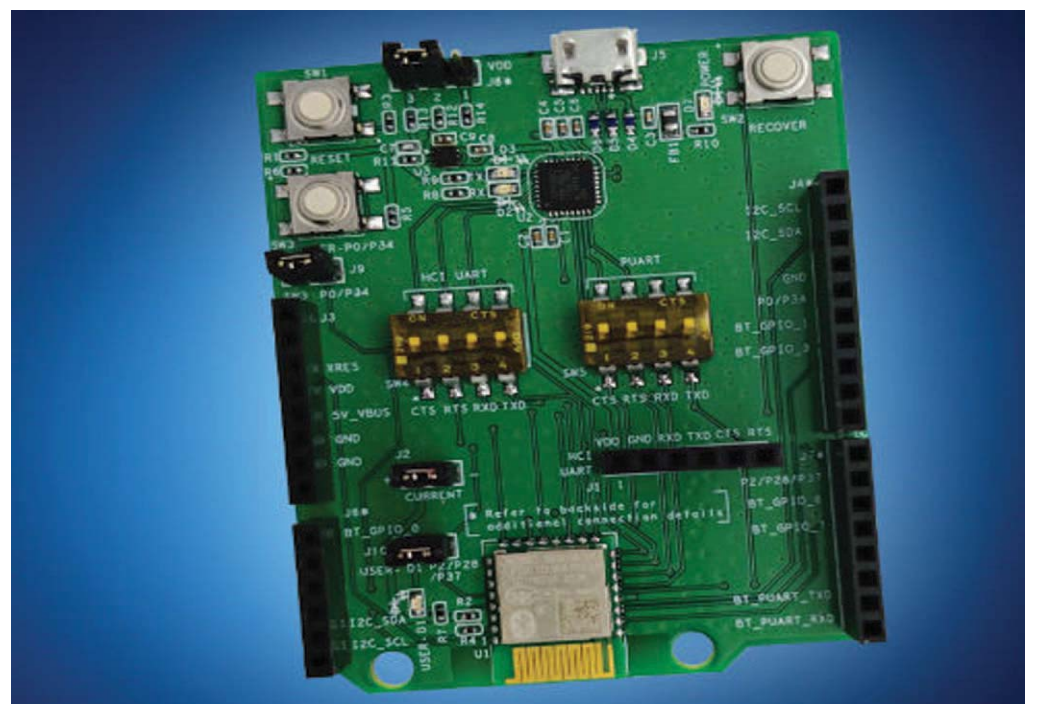
다만 정부는 개정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가 공사 규모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친환경 고효율 발전 자연도 사람도 행복합니다.

작지만 큰 가치

민간발전협회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용량의 12%(13,274MW)를 차지하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전년비 22% 증가

8410억원 지원...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8410억원을 지원한다.

핵심소재 개발과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을 묶는 패키지형 과제에 738억 원, 이종기술 결합과 업종연계 및 단기사업화를 위해 도전적 융·복합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이종기술융합형' 과제에 105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으뜸기업 전용R&D,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특화단지 공동R&D 등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대응 과제 신설, 마태선도 품목 투자를 통해 한계 극복 및 차세대 소부장기술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4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신규기회 74개 과제 및 자유공모형 과제도 공고한다.

총 588억 원 규모의 공고 과제에는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최근 기업의 니즈와 산업계 트렌드가 반영됐다.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내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3% 늘어

지난해 전체 전기설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1년 전기설비 검사량(8231;점검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늘었다.

지난해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만 건이며 불

합격은 2만8000건으로 불합격률은 2.7%였다.

다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2만15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 점검 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이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인 E등급은 1만965호로 2.4%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기준 4만4천여 소, 안전관리자는 7만 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자는 4만2948개소(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자는 38만5410개소(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998개소(51명) 등이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